

다산포럼



박원재
울곡연구원장

우리 정치 문화 개혁의 시금석이라 평가받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둘러싸고 묵하 정치권이 소란스럽다. 모름지기 개혁을 위한 논쟁은 뜨거울수록 좋으니까 이런 시끄러움을 딱히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유감스러운 부분이 없지는 않다. 논쟁의 방향이 이 제도가 우리 정치 문화를 얼마나 바꿀 것인가 하는 점보다 정당별 유불리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혐의가 짙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이런 속마음은 제도 도입을 가정하고 여러 경우의 수를 대입하여 예측한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아전 안수적으로 해석하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여기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득을 보는 것은 반대편임을 은근히

곰배령 야생화는 누가 대표하는가

부각시킴으로써 논의가 진영 대결 구도로 짜이도록 유도하는 일부 언론들도 한 몫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의 첨예한 관심과 달리 이 부분은 새로운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선거는 유권자의 지지를 더 받는 쪽이 한 석이라도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게임이라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그렇다면 정당들은 현재의 지지도나 지난 선거의 득표율에 매달려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오히려 그 시간에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더 노력할 일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우리가 정작 고민해야 하는 것은 일부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국회의원 대표성의 지역적 편차의 심화 문제이다. 패스트 트랙(신속 처리 안건)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묻혀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고 있지만, 대의민주주의란 무엇인가와 관련하여 이것은 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이른바 '여야 4당 합의안'을 따를 경우 지역구 의석수 축소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불통은 인구가 적은 농어촌과 산간·도서 지역 선거

구로 될 것은 자명하다. 여기에 선거구간 인구 편차가 2:1을 넘으면 안 된다고 판결한 201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 이 판결은 만약 어떤 기초 지자체의 인구가 최대 선거구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면 그 기준에도 도달 때까지 몇 개가 되었든 인근 지자체와 계속 통합되어야 함을 뜻한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강원도의 경우, 현재 5개 기초 지자체가 한데 묶여 있는 선거구가 2개나 되는 상황에서 무색하게 6개 지자체가 하나의 권역으로 묶이는 공용 선거구가 출현하는 것이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오는 이유이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인구를 기준으로 획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런 뉴스를 접하다 보면 이제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획정하는 단계를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인구 질벽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고, 이 추세에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곳이 농어촌과 산간·도서 지역인 상황에서 여전히 인구수를 기준으로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는 당위성은 어디에 있는 것일

까? 이대로 간다면 10개의 기초 지자체가 하나의 선거구로 묶이는 일이 생길 날도 멀지 않다고 하면 지나친 호들갑일까?

악히 알려져 있듯이, 국가를 이루는 3요소는 영토·국민·주권이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그런 요소들이 기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주요한 입법적 사항들을 처리하는 대표 기관이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국민'만 아니라 '영토'도 대표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국회의원이 국민만 대표한다면 인제 곰배령의 야생화와 울진 소광리의 금강송과 신안 개펄의 세발낙지는 누가 대표하는가? 국회의사당에서 이런 것들을 대표하여 그 가치와 보존방안을 역설하는 대표자는 없어도 되는 것일까?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기준에 선거구간 인구 편차뿐만 아니라 면적 편차도 고려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눈에 보이는 것들의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위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제대로 된 정치란 단순히 사회적 이해관계의 조정을 넘어 구성원들의 삶에 대한 그런 숙고된 전방까지 함축하는 것이어야 한다.

NGO칼럼

노는 것이 힘이다



류한호
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

시간 노동을 하면서 생존 전쟁을 치른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은 OECD 평균보다 400여 시간을 더 일한다. 연간 50일 이상을 더 일하는 셈이다. 이렇게 가족과 함께 어울리거나 삶을 되돌아볼 틈도 없이 살다가 노후엔 빈곤과 더불어 끝없는 병마와 전쟁을 치른다.

이처럼 유년부터 노년까지 이어지는 고단한 삶의 여정에서 일관되게 빠져 있는 것이 여유요, 노는 일이다. 일하는 것은 쉽고 익숙하며, 노는 것은 어렵고 두렵다. 주 52시간 노동제가 실현되면서 한국 사회는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그 어려움은 사용자들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도 겪는다. 노동 시간이 줄면서 임금소득이 동시에 줄어들어 문제다. 하지만 이 문제는 주어진 여유 시간을 보내는데 필요한 돈이 부족하고, 그 시간을 잘 보낼 방법을 모르는 데서 오는 두려움 탓이기도 하다.

세계사적 경험으로 보면 놀아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선진국은 공동적으로 노는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다. 선진국은 어린 시절부터 잘 뛰어논다. 중·고등학교 때까지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노는 기회가 열려 있다. 학교에서는 건강과 체

력, 운동, 스포츠, 야외 활동을 중시한다. 선진국 사람들은 놀기 위해 태어나고, 한국 사람들은 경쟁하고 일하기 위해 태어난다고 말하면 과장일까. 노는 일은 건강, 웰빙, 힐링, 로하스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노는 일은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형성하고, 동료들과 협력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기회를 만들며, 사람에 대한 신뢰를 키워 준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사회 자본이다. 한국 사회의 빈곤한 사회 자본 수준은 어려서부터 함께 놀지 못하고 학원 공부에만 매달린 데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놀기 위한 교육 개혁이 필요한 지점이다.

비혼과 저출산이라는 민족적·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놀기는 극히 중요하다. 사람들과 어울림 속에서 성장한 건강한 청년 남녀들은 자연스럽게 사랑과 결혼에 대한 건전한 생각을 갖게 된다. 저녁이 있는 삶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를 넘어 국가 생존과 시민 행복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일찍 퇴근하여 가족과 함께 지내는 여유로운 저녁 시간은 원만한 가족 관계와 출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노인의 노는 일은 청소년이나 중장년기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수명은 늘어

나지만, 그 늘어나는 수명이 병들어 지내는 시간이라면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고통이요, 사회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다. 젊어서부터 놀기를 통해 건강과 체력을 기르면 노인이 되어도 건강을 상실하는 시기를 늦출 수 있다. 고령화·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건강은 복지 정책의 목표요, 나라와 사회가 해결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다.

국민 소득 3만 달러 시대가 되었으니 이제 일은 덜 하고, 놀기를 더 잘하고 많이 하는 사회로 변혁시켜 나가자. 인생을 건강하고 즐겁게 살고, 노후를 무병장수하면서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도 놀기가 필요하다. 후손에게 노인 부양의 비용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도 놀아야 한다. 잘 노는 사회로 변혁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결단을 넘어 놀기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노는 문화를 만들고, 노는 방법을 개발하고 실천해야 한다. 놀기 위한 산업, 즉 문화 산업이나 여가 산업이나 관광 산업도 발달해야 한다. 병원을 짓기보다 병원이 덜 필요한 건강 사회가 더 바람직하다. 노는 것은 개인의 힘이고, 나라의 힘이다.

기고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봄을 기대하며



배문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장

없다. 올 것이 온 것이다. 둘째는 경기 침체다. 올해 불투명한 글로벌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국내 경제의 전망이 어둡다. 국내 전문가들 관에서 발표하는 각종 지표는 토대라 할 때 급내도 광주 지역의 경제 전망 또한 밝지 않다. 이는 일개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광주시가 현재의 상황을 안일하게 인식하여 손 놓고 불구경만 하다가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처럼 후손들에게 큰 부담을 떠넘겨 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30년 후를 내다보는 큰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인구 감소에 대한 장기적 플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한 단계적인 문제 해결의 단초를 시민들에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경제인의 한사람으로써 관계 기관의 면밀한 계획과 대처를 기대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최근 정부는 보도 자료를 통하여 올해 안에 대구 공항 통합 이전 최종 부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구 군 공항은 2017년 예비 이전 후보지가, 지난해에는 이전 후보지 두 곳이 선정되면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국방부와 대구시가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이 길어지면서 지지부진하였으나 공항 이전 사업비를 약 8조 원으로 합의함으로써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 국방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공화 주변 지역에는 지원 사업비 3000억 원, 생산 유발과 부가 가치 효과가 5조 7000억 원이 발생하고 5만 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생길 것으로 분석했다.

대구시 사례처럼 우리 시에서도 현재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진행 중이고 지난해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함께 상생발전위원회에서 광주 군 공항이 전남 지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하고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발표까지 하였다.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현재까지 예비 이전 후보지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 군 공항이 이전하게 되면 개발 가능한 부지가 820만㎡(248만 평)나 생긴다고 한다. 광주와 전남을 함께 성장시킬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이다. 나무 빛가람 혁신도시보다도 더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 등의 장점 때문에 이곳을 성장 거점으로 발전시킨다면 주변 지역까지 발전의 낙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항이 이전 후보 지역으로 거론되어 온 전남 4개 지역에 군 공항이 새로 건설된다면, 인공화 주변 지역에 4500억

원이 지원되고 약 6조 9000억 원의 생산 유발 및 부가 가치 유발 효과가 발생하며, 3만 8000여 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생겨서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전 지역 확정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30년 내에 인구 감소와 지역 쇠퇴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 발전의 대안으로 충분히 검토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와 관련 시도 지사의 합의를 발표 이후 좋은 분위기를 살리지 못하고 국방부가 예비 이전 후보지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앞서 대구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전향적인 태도와 다르게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성의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싶다. 국방부는 예비 이전 후보지를 조속히 선정하여 광주시가 다음 단계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광주시와 전남도, 국방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어지면 지역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다른 시도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 지역 경제가 더욱 발전하리라 확신한다.

그러하여 내년 이맘때는 화창한 봄을 온몸으로 즐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社說

전남도의 더딘 5·18 기념사업 무엇 때문인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와 전남은 하나였는데, 행정 구역상으로 1986년 광주시가 직할시로 승격돼 전남도와 분리되기 전이어서, 옛 전남도청 일대가 항쟁의 중심지였다. 하지만 80년 5월 21일 도청 앞 집단 발표를 계기로 광주에서 타오른 항쟁의 불길은 화순·나주·함평·영암·강진·무안·해남·목포 등 전남 곳곳으로 번져 나갔다.

이처럼 5·18은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전남 주민들이 함께했음에도 전남 지역의 기념사업은 미흡하기만 하다. 우선 사적지 지정부터가 그렇다. 광주에는 5·18 사적지 29곳이 지정돼 있지만 전남은 한 곳도 없다. 전남도는 지난해에야 용역을 통해 나주시 옛 금성파출소 무기고, 목포역 광장, 화순 너릿재 터널 등 87곳이 5·18 사적지로서 가치가 있는 곳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이후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되면서 사적지 지정 기준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승희(민주·영암

1) 전남도 의원은 최근 도정 질문을 통해 "전남도가 올해 5·18 기념일 전에 전남 사적지 1호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업무 태만을 질타했다.

전남 도내에서는 그동안 5·18 관련 73개의 시설에 표지석과 안내판이 설치됐지만 이마저 단순히 항쟁의 현장을 알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시군별로 관리돼 보니 일관된 체계나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현상이 40년이나 되도록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전남 지역의 5·18 기념사업이 더딘 것은 지금까지 관련 사업이 광주를 중심으로 추진된 탓이다. 여걸지 모르지만, 무엇보다도 전남도의 의지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5·18 현장은 후손들에게 오롯이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전남도는 뒤늦게라도 사적지 지정 등 기념 사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소방관들의 헌신적 사투 그리고 남은 과제는

강원 지역 대형 산불이 조기에 진화됐다. 소방관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의 헌신적 노력이 있었다. 특히 불에 그을리면서도 밤새워 호스를 놓지 않은 소방대원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은 온 국민을 감동 시키기에 충분했다. 따라서 청와대 게시판에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온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다. 여기엔 벌써 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했다고 한다.

한밤중에 전국의 소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한 소방청의 기민한 대응도 돋보였다. 속초의 보광사는 주변의 숲밭을 불길에 휩쓸고 지나갔는데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 경찰과 교육 당국, 자치단체도 잘 대처했다. 발화 지점에서 7km밖에 떨어지지 않은 화약창고는 현지 경찰이 화물차들을 동원해 화약 5t을 옮기면서 대형 폭발의 위기를 면했다.

체임 학습 중학생들이 탄 관광버스에 불이 붙기도 했지만 인솔 교사들의 신속한 대처로 무사할 수 있었다. 속초의료원

직원들은 한밤중에 의료원 앞까지 다가선 불길 속에서도 침착하게 환자와 가족 145명을 인근 대피소로 무사히 이동시켰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엄청난 산불 규모에 비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하지만 남은 과제도 많다. 먼저 야간에 띄울 수 있는 소방 헬기를 구비해야 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야간에 띄울 수 있는 소방 헬기가 한 대 구비됐지만 이 헬기는 크기가 작아 강풍이 불 때는 비행하기 힘들다고 한다.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

소방관의 국가직화 등 처우 개선도 미룰 수 없다. 소방관의 절대 다수는 지방직 신분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니 방화복 등 장비를 사비로 마련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소방관의 국가직화는 여야가 5년 전에 합의한 사항이니 법안 통과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無等鼓

"그는 자신에게 일했다. '깊이 보이는 한, 난 망명객이다. 내가 나일 수 있는 땅을 찾아가는 망명객이다.' 배낭을 추스르고서, 그는 먼 대륙을 가는 첫 걸음을 떼어 놓았다." 소설가 북거일이 1987년 발표한 소설 '비명(砒命)을 찾아서' 마지막 문장이다. '경성(京城), 소우와 62년'이라는 부제를 단 이 소설은 실제 역사사가 아니라 '대체 역사' (alternate history)를 그린다.

'만약에(if)...'를 가정한 소설 속에서 이토 히로부미는 1909

임시정부 100년

년 하얼빈 역에서 안중근 의사의 총격에 죽지 않았다. 일제는 철저한

내선일체(內鮮一體) 정책에 따라 조선을 통치한다. 그 결과 소설의 무대가 되는 1987년(소우와 62년)에 주인공 '그'는 자신을 일본인으로 알고 살아간다. 하지만 차츰 사라진 조선의 존재를 알게 되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다. 결국 그는 '도망자'가 아니라 '망명객'으로 상하이 임시 정부를 찾아 길을 나선다.

1910년 대한 제국이 일제에 의해 망해버린 후, 조국을 떠나야 했던 많은 독립운동가들 역시 소설 속 '그'와 같은 심정

이었을 것이다. 함평 출신 일강(一江) 김철(1886~1934) 선생은 1917년 상하이로 망명해 임시 정부에서 재무장·국무원 비서장 등을 맡아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하다 48살에 격무로 인한 급성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

일강 선생 생가 터인 함평군 신광면 함정리에는 기념관과 함께 상하이 임시 정부 청사(독립운동 역사관)가 같은 모습으로 재현돼 있다. 풍찬노숙(風餐露宿)하며 조국 광복을 염원한 한 독립운동가의 발자취와 상하이 임시 정부 청사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다. 임시 정부 회의실과

백범 김구 주석 침실 등이 재현돼 있고, 일제의 만행 도구 등도 살펴볼 수 있다.

4월 11일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일이다. 올해는 임시 정부 뿐만 아니라 3·1운동도 100주년을 맞는 해여서 더욱 뜻이 깊은데 기념식과 함께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함평 상하이 임시 정부 청사를 들른 뒤 '대한민국 100년, 역사를 바꾼 10장면' (국립 광주박물관)과 같은 전시회를 찾아보는 '역사 나들이'도 좋을 듯하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 | | | |
|--|-------------------|---------------------------|-------------------------|
| 光州日報 | | The Kwangju Ilbo |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 |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 |
|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 |
|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국통선 배달 안배))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안내 | 〈대표 FAX 222-4918〉 | 경영지원국 |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
| 편집부 220-0649 | 문화부 220-0661 | (FAX 222-8005) | (FAX 222-0195) |
| 정치부 220-0632 | 여론매체부 220-0652 | 기획관리국 227-9600 | 업무국 220-0551 |
| 경제부 220-0663 | 예향부 220-0692 | (FAX 222-0195) | (FAX 222-0195) |
| 사회부 220-0664 | 사진부 220-0693 | 디자인실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
| 전남본부 220-0642 | 체육부 220-0697 | (FAX 02-773-9335) |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